

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24호)

◦ 2018. 09. 07.
◦ 재정건설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08.24.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08.31.
- 다. 상 정 일 자 : 2018.09.07.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(1회 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관리국장 강성욱)

『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』의 상위법령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최충열)

■ 본 개정안은

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

○ 안 제3조 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건물번호판을 교부 및 재교부할 때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 (이하 ‘시행규칙’이라 합니다.)의 제8호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였는데,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을 ‘별지 제14호서식’으로 변경하고,

○ 현행 제6조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,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, 이는 행정내부의 업무 분장 내지는 업무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함은 적당치 않아 삭제하였습니다.

○ 안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,
현행 조례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근거로 「도로명주소법」 (이하 ‘법’이라 합니다.) 제13조1)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(이하 ‘령’이라 한다.) 제17조2)를 명시하였는데,

법 제13조는 “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

1) 제13조(유지관리의 위탁 등)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없어지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2) 제17조(유지관리의 위탁 등)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. <개정 2011.12.30.>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”
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,

영 제17조는 “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
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”고 하여 조례에 재 위임하였으므로, 중복된 위임
조항 중 법 제13조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 기준을 명시한
영 제17조만 근거규정으로 삼는 것입니다.

○ 안 제13조 제1항은,

현행 조례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
다고만 규정하고 있어, 20일의 시작시점이 불명확하므로,

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3) “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”는 조문을 인용하여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,

○ 같은 조 제3항은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4)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, 광고사업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 시안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므로, 이를 “협의·확정할 수 있다”로 개정하여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○ 안 제16조는, 현행 제16조가 인용하고 있는 법 제22조5)는

3) 제15조(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) ⑥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, 관보·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 ⑦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,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·관리해야 한다.

4)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5) 제22조(도로명주소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.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. 택배회사,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·규격별로 제작·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4. 버스·지하철 정류장, 광장, 지하도,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. 관광호텔 지도, 교통 지도, 렌터카 지도, 관광안내 지도, 백화점 지도,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 안내 지도에 도로명 안내지도 표기 지원 6.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

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명주소의 ‘생활화’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, 상위법에 맞춰 “사용 촉진” 및 “사용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,

○ 안 제18조는,

현행 조례가 위원회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것을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변경하여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,

안 제18조의2 “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”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였습니다.

■ 종합검토의견

이와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 및 용어를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회의 연임제한 및 제척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및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,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) 안 제3조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변경하는 것인데, 이것이 개정된

것은 2011년 12월 30일이었음에도, 이제야 개정하는 것은 개정작업이 너무 지체된 것으로, 앞으로는 주의해야 할 것임

답 :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체된 것인데,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로 상위법 개정 등에 더욱 신경을 써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

질> 제15조제1항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, 2018년도 도로명주소 홍보예산은 76만원이 편성되었음.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어느 정도 정착된 상황에서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데?

답 : 예산은 적지만 각종 홍보물이 구민들에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아직은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함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체계사구정리내용 : 없음